



'고강도 檢개혁' 警에도 혁신 주문 李대통령...민주적 통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

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선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뢰 위해 끊임없이 혁신 민주·스마트·민생 경찰 거듭나야

"일부 지휘부 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오직 국민 편에 서야

대한민국 근간은 '민주 경찰' 자랑스러워, 이 나라의 주춧돌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 달라"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라"고 촉구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마찬가지로"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을 구한 영웅도 있으며, 휴가 중에도 낱가로온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말없이 끊어진 신호 전화 한 통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생

사의 갈림길 위에 선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도 있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며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재차 격려했다.

이재봉 기자

보유세 인상 선 굵고 공급확대 강조 "재개발·재건축 지원"

부동산 TF 구성...단장에 한정애, 기재위·행안위·정무위원 참여

국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공세엔 "청년·서민 가스라이팅 말라" 반박

"공급 정책이 중요...열어두고 논의토록 TF 비공개 운영"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 등 의결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 이어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분명하게 이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부동산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국토교통부 북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부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부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0·15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용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 단축을 위한 모듈러 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및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위한 제정법도 함께 추진한다.

이울러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한 당의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

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사실을 왜곡한 '가스라이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경기지역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한 이 차관은 과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방식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한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 이 아닌 것은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심귀영 기자

제24회
이천쌀
문화축제

맛과 멋이 어우러진,
쌀도 잇는 즐거움

The 24th
Icheon Rice
Festival

2025.10.22.(수)~10.26.(일)
이천농업테마공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